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2년 사업내용 보고

2023. 3.

법원행정처

I. 보고 배경

-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2021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안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

- 향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다음해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위 결정에 따라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2년도 사업내용을 보고함

II. 2022년 사업내용

1. 법원행정처 추진사항

가.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시행

1) 개요

- 2021. 9. 8.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법부의 성평등 문화의 실태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이에 관한 정책 제언을 받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

- 연구자: 사단법인 올젠더와법연구소(책임연구원: 김진)
- 연구기간: 2021. 12. 20. ~ 2022. 8. 31.(8개월)



- 연구금액: 99,960,017원

2) 연구방법

▣ ① 문헌조사 ⇨ 사법부 조직과 성평등 정책의 현황 및 쟁점 파악

- 성평등 정책, 일·가정양립 등 관련 사법부 내부 규정이나 지침
- 사법부의 인사, 위원회,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등 관련 각종 통계자료

▣ ② 설문조사 ⇨ 사법부 구성원들의 조직 경험과 성평등 인식 확인

- 조사방법 및 기간: 코트넷에 가상PC로 접속해 온라인 참여(22. 7. 7. ~ 22. 7. 20.)
- 조사대상: 사법부 구성원 전체(법관 및 법원직원 등 법원구성원 일체)
- 참여인원: 1,221명(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18,566명 중 약 6.6% 참여)
- 조사내용
 -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 젠더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성폭력에 대한 직·간접 경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욕구와 제도 운용 실태, 인사 관리 실태, 성인지 재판 역량에 대한 평가, 현행 성평등 관련 제도의 경험과 성평등을 위한 과제 진단 등

▣ ③ 심층면접 ⇨ 사법부 조직 특성과 성차별 경험, 성폭력·성희롱 피해 실태 및 대응체계 확인

- 면접참여자: 51명
 - 면접참여자 모집은 연구진의 인맥, 사법부 구성원의 소개, 법원행정처의 홍보 메일을 통한 본인 신청, 법원의 추천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
- 면접방식: 집단면접(총 14개 집단) 및 단독면접(10명)
- 조사내용



- 법원의 조직문화 및 업무 환경, 채용, 근무평정 등 인사에서의 성차별 경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관련 경험, 그 외의 성차별 경험 및 대응, 성평등 관련 교육 및 제도, 성인지적 재판 역량, 성희롱·성폭력 경험과 대응 등

3) 연구 결과 - 사법부의 성평등 관련 실태 파악(요약)

▣ 사법부 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 사법부 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 볼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전담 인력 부존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상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음¹⁾

▣ 사법부 구성원들의 성평등 인식 정도

- 사법부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에 차이가 존재함²⁾
- 성평등·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문제제기를 어렵게 함
- 법원 내에는 여전히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차별적 문화와 간접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고,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차별조차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법부 조직 특성과 성차별 경험

- 법관과 비법관 모두 고위직급이나 중요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직위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편향이 심각함
-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만큼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으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 중심적·법률혼 중심적 제도로 비혼, 미혼, 성소수자, 비육아자 등은 혜택 없이 불이익만 떠안는다는 인식을 만들고 있음

1) 2019년~2022년 성희롱 등 방지 정책 심의 건수 0건

2) 설문조사 응답자의 73.9%가 사법부가 다른 정부부처에 비하여 성평등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답했으나, 사법부의 성희롱 피해 발생률은 공공기관 전체의 피해율보다 높은 편임



-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과 더불어 관행이나 구조적 차별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차별 문제를 공적으로 논의하거나 개인적으로 상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이 발견됨

▣ 성폭력·성희롱 피해 실태 및 대응체계

- 사법부는 ‘양성평등지원관 중심의 성폭력·성희롱 대응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심층면접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양성평등지원관을 통한 피해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양성평등지원관을 통한 구제 사례도 매우 적음
- 이처럼 양성평등지원관을 중심으로 한 사건처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① 양성평등지원관의 전문성 부족 ② 제도의 홍보 부족 ③ 양성평등지원관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 부족 ④ 물리적 자원 부족이 있음

4)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

조직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점검	①사법부의 독자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도입 ②성평등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 및 전담 기구(인력) 마련 ③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불균형 완화
조직구성과 인사에서의 성평등 제고	①균형인사지침, 관리직 목표제 등 균형인사의 실질화 ②인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절차의 투명화 ③특정 성집중 직무(행정·속기직렬 등)에 대한 인사 관행 점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체계 점검과 개선	①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공식적 사건처리체계 재구축 ②피해자 지지, 조력 중심의 양성평등지원관 제도 재구성 ④양성평등지원관의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훈련 ⑤조직 차원의 성평등·성인지 의식 강화
조직문화 개선	①상호평정 도입 등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구체적 방법 모색 ②일·가정양립 지원을 넘어 일·생활 균형 위한 제도 개선 ③소수자 문제를 자연스럽게 가시화하는 일상 속 다양성 확보



5) 향후 계획

- ▣ 정책연구용역이 1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기초로 사법부 내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한 ‘사법부 성평등 기본계획(2024년~2028년)’ 과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예정
-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실시 사항은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매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

나.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TFT 구성

▣ 개요

-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안된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소관부서 간 협업을 위하여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TFT’를 구성함

▣ 운영 방식

● 구성

- 팀장: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팀원

실·국	심의관	서기관	사무관
사법지원실	이재원	임서경	
기획조정실		고원혁	원영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천은희	김홍석
인사운영심의관실	차기화	이기동	유광선
인사협력심의관실	황중삼	이준복	김은표
복지후생담당관실		이현미	조은희
총무담당관실		김종두	이응석



▣ 기본계획의 구성

● 기본계획의 구조: 비전 - 목표 - 대과제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비전·목표: 비전은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목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
- 대과제: 개선하고자 하는 영역의 가장 큰 범주
- 핵심과제: 대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책사안
- 세부과제: 핵심과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정책과제

●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대과제, 핵심과제(안)

비전	목표	대과제	핵심과제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사법부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수립	사법부의 독자적인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사법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성인지 통계 작성·공개 등 정례적 점검 체계 구축 성평등 정책 심의기구 설치 및 추진인력 배치
	균형 있고 성평등한 조직	인사 및 조직구성에서의 성평등 제고	균형인사지침·관리직 목표제 등 균형인사의 실질화 인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절차의 투명화 성차별적 인사 관행 점검 및 개선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현	상호평정 도입 등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방안 모색 일·가정양립을 넘어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개선 구성원의 성평등·성인지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건전한 조직문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체계 개선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기구 설치 피해자 지지·조력 중심의 양성평등지원관 제도 재구성 양성평등지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



▣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기본계획은 상위 과제에서 하위 과제 순으로 수립함[비전·목표 → 대과제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① 소관부서의 검토 → ② TFT 기본계획 초안 작성 →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의결
 - 각 핵심과제의 소관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 소관부서에서의 검토를 선행하여 진행함 ⇨ 각 핵심과제 논의 시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 간 소회의체에서 논의하거나, 관련 실·국, 관련 구성원, 외부 기관·단체 등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함
 - 소관부서의 검토방식과 검토 결과 등을 취합하여 TFT에서 논의하고 이를 발전시켜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 TFT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의결 전에 사법부 전 구성원에 대한 공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

▣ 제1차 TFT 회의 요약

- 일시 및 장소: 2023. 3. 2. 14:00 대법원 409호 회의실
 - 회의 내용
 - 정책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비전·목표, 대과제 초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음 ⇨ 비전·목표, 대과제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중 개최되는 차회 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함
 -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핵심과제(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소관 부서를 확정함 ⇨ 소관부서별로 핵심과제(안)에 대한 기초 검토를 진행하여 수용·불수용, 수정 의견 등을 제시하기로 함
- ▣ 소관부서 별 검토할 핵심과제(안) 목록

담당 부서	핵심과제(안)
-------	---------



담당 부서	핵심과제(안)
전체 부서 협업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성인지 통계 작성·공개 등 정례적 점검 체계 구축
사법정책심의관실	성평등 정책 심의기구 설치 및 추진인력 배치
인사총괄심의관실	균형인사지침, 관리직 목표제 등 균형인사의 실질화
/인사운영심의관실	인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절차의 투명화
/인사협력심의관실	
인사운영심의관실	성차별적 인사 관행 점검 및 개선
/인사협력심의관실	상호평정 도입 등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방안 모색
기획운영심의관실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생활 균형 위한 제도 개선
/총무담당관실	
복지후생담당관실	구성원의 성평등·성인지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사법정책심의관실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기구 설치
/복지후생담당관실	피해자 지지·조력 중심의 양성평등지원관 제도 재구성
	양성평등지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향후 일정

- 비전·목표, 대과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확정
 - TFT에서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비전·목표, 대과제를 확정된 후, 각 소관부서별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검토하여 TFT 회의에서 내용을 공유
- 기본계획 초안 작성
 - 소관부서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TFT에서 기본계획 초안 작성 및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 보고
 - TFT에서 작성된 기본계획 초안을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

다. 예산 관련 추진사항

1) 2023년도 대법원 예산 중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7,600백만 원 예산 편성(감 1,338백만 원)

- 남양주지원 어린이집 설치 완료로 인한 자연감(△1,338백만 원) 외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등 예산 전년 수준 확보

2) 성평등 관련 예산 확보

-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예산 전년 수준(3,006백만 원) 확보³⁾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지원

- ▣ ‘직장인 지원프로그램⁴⁾’ 증액 편성(증 169백만 원 ⇨ 총 491백만 원)

- Life Coaching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사 상담),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증액

3) 2024년도 대법원 예산(안)에 성평등 관련 예산 증액 요구 ⇨ 5개년(23년-27년) 중기계획서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제출(2023. 1. 31.)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증액(증 4,186백만 원) 요구 ⇨ 총 11,786백만 원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비 현실화 노력

-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증액(증 1,703백만 원) 요구 ⇨ 총 4,709백만 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원활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현실화 노력

3) 관행적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20년, 21년 감액되어 왔으나, 22년 예산부터 전년 동 유지

4) 법원 구성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및 원격교육으로 가족간 갈등이 증가하자 해당 프로그램 수요도 증가. 23년 예산을 증액하여 가정생활 및 육아에 있어 부모의 성평등 도모



라. 기타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내용

1) 전국 법원(지원 포함) 양성평등지원관 선정

▣ 개요

-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피해자 보호 및 제반 조치를 위하여 각급 법원(지원 포함)에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각 법원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법원에서 선출하거나 지정)
- 양성평등지원관은 각급 법원에서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처리절차·피해회복지원 등 사항을 안내하며, 필요 시 공식적 처리절차(양성평등심의위 회부)로 인계하는 역할을 함

▣ 지정 현황

- 법관: 2022. 7. 기준 전국 법원(지원)에 155명의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
- 직원: 2022. 7. 기준 전국 법원(지원)에 258명의 양성평등지원관을 지정

▣ 각급 법원 양성평등지원관 전문교육 교육비 지원

-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상담,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조력인 역할 등 양성평등지원관의 역할 강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 법원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온라인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지원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2020년부터 지원)
- 2022년 각급 법원 전문교육 이수자 및 교육비 지원 현황
 - 전국 32개 법원 42명 이수(3,789,000원 지원)
 - [참고] 2021년: 28개 법원 40명 이수(3,600,000원 지원)



2) 2022년 양성평등지원관(법관) 워크숍 개최(2022. 7. 15.)

▣ 개요

- 취지: 양성평등지원관(법관) 제도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고, 법원 내 구체적 성차별·성희롱 사례 발생 시 양성평등지원관(법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일시 : 2022. 7. 15.(금) 9:30 ~ 16:40
- 장소 : 사법연수원
- 참석자 : 양성평등지원관(법관) 32명

- 참고 사진



▣ 세부 주제 요지

- 제1주제 ‘바람직한 성희롱 등 처리절차’ (김윤선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역할, 법원 내 성희롱·성차별 사례, 각급 법원 지침의 현황 및 개선 논의
- 제2주제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 (유성희 판사, 차성안 교수)



-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접근방법 및 해결방안을 제안함

- 제3주제 ‘성희롱 사건 관련 실무 - 경험과 고민을 중심으로’ (김진 변호사)

- 실제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 공유, 조사자로서 양성평등지원관이 주의해야 할 점 교육

- ▣ 양성평등지원관 제도 개선 의견 제시

- 워크숍에서 양성평등지원관들 사이에 제도 개선 의견이 활발히 공유함

- 양성평등지원관 제도와 고충처리절차의 통합 여부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지원관을 통해 절차 진행하는 경우 주변의 불필요한 호기심과 2차 피해 커질 우려 있으며, 고충처리절차에 비해 처리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음 ⇨ 향후 절차와 담당자의 통합 여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현행 지침 상 조사절차 진행과 피해구제방안의 제시에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요건을 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참고]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조사)

④ 양성평등지원관은 조사 신청을 접수한 성희롱 등 관련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
2. 조사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는 제외)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제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② 법원행정처장은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의 원활한 조사, 피해자의 인격권·근로권의 보호,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무분담 조정
2.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공간 분리
3.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제10조 (피해구제방안의 제시 및 이행)

- ① 양성평등지원관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에게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 등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제시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하여 **피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동의하고** 행위자가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양성평등지원관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 탄력적인 조사절차 진행의 여지 / 조사 절차에서 원만한 종결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한 해결방안을 두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적합 / 피해자가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역행 / 피해자 보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 (-) 피해자가 조사에 명백히 반대하지 않음에도 제3자의 신청 취하만으로 조사를 유예하거나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취약 / 조사신청이 취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사건의 투명하고 공식적인 처리,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부의 원칙 강화에 어긋남

▣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양성평등지원관 제도 개선 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3) 양성평등심의위원회

▣ 개요

- 각급 법원에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내규를 제정하여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 등 사건의 처리와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식적 사건 처리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22. 7. 기준 전국 38개 법원 중 37개 법원에 양성평등심의위원회가 설치됨

▣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요

- 근거 규정: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 당연직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 위원 6명: 법관, 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기위촉되었던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원 위촉 (2022. 8. 8.)

▣ 실질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 2022년 한 해 동안 양성평등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경우가 없는바,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사례 모두 피해자가 자율적 피해구제절차 또는 절차 종결을 희망하여 징계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됨
- [참고] 2022년 전국법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처리 현황

고충신고서 접수 건수	처리 현황		
	자율적 피해구제 절차로 종결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인계
	행위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피해자의 종결희망	
2	1	1	0

- 양성평등심의위원회가 사법부 내 유일한 성평등 정책 심의기구이자 공식적 사건처리 기구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건처리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TFT의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임

4) 온라인 신고센터,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양성평등지원관을 방문하거나 대면하여 피해 사실을 상담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센터(전국 단위), 사이버 신고센터(각 법원 단위)를 운영
-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온라인 신고센터, 사이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사이버 신고센터 담당자 지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5)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운영

▣ 개요

-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로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법원 직원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의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22. 5. 상담위원의 재위촉 또는 신규 상담위원을 위촉(신규 상담위원 2명 및 재위촉 상담위원 22명 위촉)하고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함

▣ 구체적인 상담절차





▣ 상담 현황

-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양성평등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총 28회 상담이 진행됨

▣ 2022년 예산 확대

- 양성평등 심리상담 신청 대비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2022년도 관련 예산이 10,000,000원으로 확정(전년 대비 5,000,000원 증액)
- 2024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한 중기사업계획서에 관련 예산을 20,000,000원으로 확대 요청하였음

2.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2022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내용

가. 2022년 젠더법연구회 주요 성과

1) 대법원 젠더법연구회·한국젠더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1 「젠더판례백선」 출간기념, 젠더판례 토크아보기>

▣ 개요

- 일시 : 2022. 2. 26. (토) 14:00~18:00
- 장소 및 방식 :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 회의실

▣ 프로그램

'21 「젠더판례백선」 출간기념, 젠더판례 토크아보기 (14:00~18:00)		
시간	내용	비고
13:50~14:00	○ 등록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박선영(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환영사(축사): 이숙연(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특허법원 고법판사)	



제1부: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젠더판례백선> 출간기념 세미나 (14:10~16:00) (발표 20분 / 토론 10분)		
14:10~15:30	○ [대주제] 젠더판례의 흐름과 전망 - 발표 및 진행 : 신숙희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발표 각 20분
	○ [제1 소주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및 그 조력인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발표 : 임혜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제2 소주제]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의 업무상 재해 포섭 - 발표 : 장원지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제3 소주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의미 - 발표 : 범선운 판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15:30~15:55	▶ 토론 토론 1: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2: 조승규 (반올림 상임활동가, 노무사) 토론 3: 원민경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토론 각 8분 미만
16:00~16:10	중간휴식	10분
제2부: 2021년 올해의 판례 훑어보기 (1시간 50분) (발표 20분 / 토론 10분) 좌장: 이유정[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16:10~17:10	○ [제1주제] 성폭력범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중심으로 - 발표: 김재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발표 각 20분
	○ [제2주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쟁점과 그 의미 - 발표: 김보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 [제3주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 사건 - 발표: 주현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안)	
17:10~17:40	▶ 토론 - 토론 1: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2: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3: 김은엽 (인천지방법원 판사) - 토론 4: 임수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토론 각 7분
17:40~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 <젠더판례백선> 출간기념회는 젠더 이슈에 대한 법원의 고민, 발전 과정을 외부에 공유함으로써 젠더판례의 의의와 방향성을 되새기고, 최근 선고된 주요 젠더 판례에 관해 주 수행 변호사로부터 상세한 진행과정을 청취하며 젠더 관점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됨

2)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행사

▣ 개요

- UN은 2021. 4. 28. 총회 결의로 매년 3. 10.을 '세계여성법관의 날(International Day of Women Judges)'로 정하였음
- 젠더법연구회는 제1회 세계여성법관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하고, 해외 행사, 아프가니스탄 여성법관을 위한 모금 활동을 소개, 참여함

▣ 젠더법연구회 주최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행사

- 취지: 소수자 보호와 제3세계 여성법관들에 대한 지지 등 여성법관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고찰하기 위함
- 주제 :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이해와 인도주의적 위기 전망
- 일시 : 2022. 3. 10.(목) 19:00~21:00
- 장소 및 방식 :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 회의실
- 내용
 - 영상시청 : 아프가니스탄 여성법관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
 - 이주연 해외사법팀장이 세계여성법관회의 뉴스레터,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BBC 뉴스 등 해외자료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여성법관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하여 설명함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한 2021. 8. 이후 현지 여성 판사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지원 내용 등을 알 수 있음



있음

- 강연 및 질의 :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이해와 인도주의적 위기 전망
 - ▣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가 ‘미군 철수와 아프가니스탄 관련 정세’라는 주제로, 아프가니스탄 현대사의 흐름과 지정학적 의미,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벌어진 20년간의 전쟁, 2021년 미군 철군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여성, 특히 여성 지식인에 대한 반인도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선거 등을 통해 여성들의 굳건한 개선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을 소개함

▣ 세계여성법관의 날 기념 해외 행사 소개 및 참여

- IAWJ’s Dialogues on the first Annual International Day of Women Judges : 여성법관들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간담회
 - 세션 1 : 2022. 3. 10. 23시(워싱턴 시각 9시)
 - 세션 2 : 2022. 3. 11. 5시(워싱턴 시각 15시)
 - 이숙연 회장 등 회원 다수가 세션 1에 참여함
- UNODC의 고위급 행사 소개
 - Women in Justice/for Justice
 - 2022. 3. 10. 22:30~23:30(비엔나 시각 14:30~15:30)
 - UNODC가 젠더 균형, 젠더 반응성(gender responsiveness)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를 소개함
- 카타르 사법부 및 세계 사법청렴성 네트워크의 고위급 행사 소개
 - 카타르 사법부에서 성평등, 사법부에서의 공정한 젠더 대표성 등에 관하여 주최한 행사를 소개함
 - 2022. 3. 10. 15:00~18:00(카타르 도하 시각 09:00~12:00)

3)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법관 연수



▣ 개요

- 일시 : 2022. 5. 9.(월)~2022. 5. 10.(화)
-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온라인 병행)

▣ 일정표

일자 시간	5. 9.(월)	5. 10.(화)
오전	연수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09:50-10:0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여성의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10:00-11:40)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수정
	특강 - 법관의 젠더인식 - (10:00-11:40) 대법관 오경미	
중식		
오후	아동·장애인 진술의 특수성 I (13:30-15:00)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장형윤	디지털 성범죄의 분류 및 확장 (13:30-15:10)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송유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경
	아동·장애인 진술의 특수성 II (15:20-16:50)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장형윤	다큐 '너에게 가는 길' 감상 및 토론 (15:20-17:20) 감독 변규리

-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 사건 이후 제도 개선과 향후 증인신문절차 진행 시 유념해야 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음, 확장되어 가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제도적 과제, 성소수자의 성별정정의 문제에 대해 개선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됨

4)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 개선 연구 소모임 활동

▣ 구성 취지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524 전원합의부 결정)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증인신문 절차 개선 필요성
- 2022. 3. 18.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개선 연구 소모임(이하 ‘아청소년모임’)을 구성함

▣ 주요 활동 내용

- 2022. 4. 8. 아청소년모임 킷오프 회의 : 팀 구성 및 주제 선정
- 2022. 4. 13. 소모임 안내, 향후 일정 공지 게시(김윤선 팀장)
- 2022. 4. 29. 20:00 임수희 부장판사 초청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특수성’에 관한 온라인 강연
- 2022. 5. 9.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중 관련 내용 기획
 - 장형운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동·장애인 진술의 특수성’강연
 - 고은설 부장판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관련 재판장 소송지휘 토론
- 2022. 6. 10. 19:30 아청소년모임 온라인 중간 세미나 ‘아동청소년 증인신문 절차 개선 방향’ 개최
- 2022. 9. 재판자료집 아청소년모임 부분 원고 투고
- 2022. 12. 9. 아청소년모임 자료집 ‘아동 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증인신문개선방안 연구’ 발간

▣ 활동에 대한 평가

- 현재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현실화됨에 따라 여러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에서부터 영상재



판, 증거보전절차 등 활용가능한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책, 해외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의견을 전달함

5) 재판자료집 발간 사업

▣ 추진 배경

- 젠더법연구회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시의적절한 젠더이슈를 발굴하여 재판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작하고자 함
- 주제, 집필자 선정에 젠더법연구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희망이 반영 되도록 노력함

▣ 발간 과정

- 2022. 5. 재판자료집 집필자 및 감수자 선정, 재판자료집 발간위원회 구성
- 집필진 및 감수단 총 60명으로 구성된 재판자료집 발간위원회를 구성함
- 2022. 8. 29. 집필 초고 마감
- 2022. 9. 26. 집필 최종본 제출
- 2023. 2. 재판자료집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발간

▣ 평가

- 주제 공모를 통하여 시의적절하면서도 되새겨야 할 재판 전반의 젠더 관련 이슈를 선정하였고, 전국 모든 회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였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집필진과 감수단을 구성함
-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젠더법 관련 중요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음. 향후 젠더 이슈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판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6) 재판자료집 발간 기념 심포지엄, 『재판 속 젠더』 개최

▣ 개요



- 일시 장소 : 2022. 12. 9.(금) 18:40~22:00,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
- 방식 : 오프라인, ZOOM 실시간 온라인 병행(수어통역, 문자통역 제공)

▣ 프로그램

시간	세션		
18:00~18:40	식사 및 등록		
	인사말	회장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숙연	
	전체사회	학술간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1세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 김윤선	
18:40~20:00	형사 재판 속 젠더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 및 개정 논의에 관한 검토 · 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순현	· 토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 부부장검사 손명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성적 자기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발표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서현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 증거보전 절차(증인신문)에 대한 고찰 · 발표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송	· 토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홍진영
휴식			
	2세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아	
20:20~21:15	2-1 성소수자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와 차별에 관한 검토 · 발표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태환	· 토론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은실
		성소수자 난민과 ‘숨겨진 정체성’의 문제 · 발표 :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지숙	· 토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계영
21:15~22:00	2-2 배우자의 권리	연금수급권과 양성평등-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발표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 토론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김윤정
		이혼소송에서 가사노동분담표 활용 방안 ·발표 :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미영	
22:00~	종합토론		

▣ 평가



- 재판자료집 수록 논문 중 형사재판, 성소수자의 권리,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함, 집필자의 발표 이후 해당 주제에 전문성을 인정받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실시간 문자통역, 수어통역이 제공됨으로써 소수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히고, 재판자료집 발간을 법원 내·외에 홍보하는 기회가 됨

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022년 주요 성과

1) 금요 작은 세미나

▣ 개요

- 2021. 2.부터 월 1회(첫 번째 주 금요일) 개최
-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매회 약 40명 참여
- 연구회의 외부 자문위원들로부터 각 전문 분야와 관련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발제자와 참여 법관 및 외부 자문위원 상호간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질의가 이루어짐
- 발제 자료와 후기를 커뮤니티와 유관 연구회에 게시하였고, 세미나 성과물을 단행본(‘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으로 편집하여 발간할 예정(2023년 3월)

▣ 2022년 세미나 개최일 및 주제

- 1회(2022. 3. 4.)
-피해자를 바라보는 걱정된 시선과 태도에 관하여(김태경)
- 2회(2022. 4. 8.)
-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 증인지원관으로부터 듣는다(김셋별)
- 3회(2022. 5. 13.)
-성폭법 대체입법 방향에 관하여(박수현)



- 4회(2022. 6. 10.)
 - 증인안내영상 시즌2를 위한 GV('모모씨 증언하러 법정 가다 그 이후')(강유가람, 이미경)
- 5회(2022. 8. 26.)
 - 아동청소년의 자기촬영 성적 영상의 형사법적 규율(사전 청소년 면담 내용과 함께)(임미경, 박숙란, 홍진영, 곽경민)
- 번외편 간담회(2022. 9. 21.)
 - 성매수자 처벌법안 이후 5년, 왜 프랑스는 성평등모델을 선택했나(로젠이셰르 활동가, 모드 올리비에 전 하원의원)

2) 판례 함께 읽기

▣ 개요

- 2021. 5.부터 월 1회(세 번째 주 월요일) 개최
-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매회 약 30명 참가
- 판례자료와 발제자를 모집하여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고, 모임 이후 후기를 게시하였으며, 세미나 성과물을 단행본('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으로 편집하여 발간할 예정(2023년 3월)

2022년

- 1회(2022. 5. 23.)
 - 성폭력범죄와 위법수집증거 종합(2016도348)(전유상, 박진수, 정희선, 나재영)
- 2회(2022. 6. 20.)
 -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2016도587)(조정민, 김진원, 박수연)
- 3회(2022. 7. 18.)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 요건과 피의자의 참여권, 피해자 보호 문제(2016도9596, 2019도4938)(유성희, 김찬미, 임미경, 정희선)



3) 긴급공개토론회(2022. 1. 10.)

▣ 개요

- “미성년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 일시 장소: 2022. 1. 10.(월) 19:00, ZOOM 온라인 회의 방식
- 참여인원
 - 사전 온라인 참여 신청자 580여명(법원 관계자 90여명, 검, 경, 진술분석관, 진술조력인 등 수사기관 관계자 40여명, 변호사 100여명, 활동가 100여명, 기자 15명,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200여명)
 - 토론회 당일 Zoom 접속 연인원 530여명, 동시접속자 300여명 유지

▣ 일정표

내 용		
세션 1 (19:00~19:50)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성	
	발제	
	지정토론	
	○ 김지은(대구해바라기센터 아동 부소장) ○ 조현주(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장옥선(진술조력인)	
세션 2 (19:50~20:40)	현재결정의 내용과 의미	
	발제	
	지정토론	
	○ 김동현(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오선희(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세션 3 (20:40~21:30)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대책	
	○ 오정희(검사, 서울고등검찰청) ○ 박기쁨(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세션 4 (21:30~22:00)	총 합 토 론	
	사회: 조정민(판사, 부산지방법원)	



4) 공개토론회(2022. 10. 28.)

▣ “성범죄 재판의 최신쟁점” 공개토론회

● 일시 장소: 2022. 10. 28.(금) 19:00 , 대법원 중회의실 및 온라인 ZOOM

● 참여인원

- 사전 온라인 참여 신청자 601여명(법관, 검사, 변호사, 성폭력상담소, 영성의 전화 등 여러 시민단체, 국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학교, 해바라기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군사법원, 군인권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리상담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여러 언론 소속 관계자, 일반 시민 등)
- 토론회 당일 Zoom 접속 530명

▣ 일정표

내용		
인사 : 오경미 대법관(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회장)		
제1부 (19:00~20:30)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와 실무 (사회 : 김동현)	
	발제	지정토론
	○ 발표 : 전유상 ○ 공동집필 : 김찬미, 박진수, 이순혁, 전유상 ○ 감수 : 김동현, 조정민	김웅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희선(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박수연(前 DSO 대표)
	종합토론(채팅창 포함)	
제2부 (20:30~22:00)	형사절차의 기본원칙과 피해자 보호의 관계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발제	지정토론
	○ 조정민 ○ 김진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경기대학교 교수)



		정은희(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증인지원관) 김지은(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
	종합토론(채팅창 포함)	

-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2022년에 진행하였던 금요작은세미나와 판례함께읽기 모임의 내용과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동안 연구회 내에서 연구활동을 이어온 법관들의 발제와 외부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함

다.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 구성 취지

-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위헌 결정에 따른 법원의 연구 및 대응 필요성 제기
 - 2021.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위헌 결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성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동인 성범죄사건뿐 아니라 성범죄사건 전반에 대한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반의 연구·검토 대상



- 위헌 결정의 취지 분석 및 위헌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검토
- 성범죄사건의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법칙, 심리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사례 수집 및 검토
- 성범죄사건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도출 및 매뉴얼화

▣ 연구반 주요 활동 내용

- 2022. 2. ~ 2022. 9. 연구·검토 진행
- 「2022년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
 - ① 아동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기일 전 단계 참고사항
 - ② 아동 등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시 참고사항
 - ③ 영상증인신문 참고사항 1(중계시설에 의한 증인신문 보고서)
 - ④ 영상증인신문 참고사항 2(영상신문의 장소별 고려사항)
 - ⑤ 증거보전절차 참고사항(증거보전특례 관련 유의사항)
- 「성범죄사건 심리 참고사항 책받침」 제작 및 배포

▣ 평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 시 유의할 사항 등 바람직한 성범죄사건 심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하여 법관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한 감수가 이루어짐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재판실무상 개선·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최종보고서 및 이를 요약한 책받침은 향후 성범죄 사건 관련 실무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끝>